

민·관이 열어가는 주민 통합서비스



| 최 인규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상임대표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창립된 배경 및 목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 중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본인을 포함하여 민간단체 15여명을 초청, ‘주민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공체계의 중심적 과제인 민관협력 체계의 한 축으로서 민간의 네트워크를 전국과 지역(시·군·구, 시·도)에서 원칙과 방향에 맞게 구성·운영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조직은 원칙과 방향을 갖고 있을 뿐,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민간단체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 지역과 부문의 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들이 새로운 체계에 알맞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참여한 부문 및 지역의 민간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의 헌신적 봉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전국 네트워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향후 통합서비스 실현에 필수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충분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구와 조직이 그렇듯이, ‘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존하는 모든부문과 지역의 서비스 관련 민간단체가 획일적으로 일시에 동의하고 합의할 수는 없다.

다만 2005년 여름부터 시작된 논의과정이 열린 공간으로서 민주적 절차를 최대한 견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더욱 광범한 논의와 합의를 넓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전국 단위의 광범한 부문이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그간의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한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공동대표들과 실행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복지, 보건, 고용, 문화, 평생학습, 주거 등 지역 내 민간기관들 간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년 여름부터 복지, 고용, 문화 등의 서비스 관련 전국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를 계속하면서, 이들 전국 차원의 단체들에 소속된 각 지역에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를 지속했다.

를 가진 것이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출발이었다.

그 자리에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달 체계의 한계와 문제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인식하였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태수)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공동연구 과정에 민간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지속하면서 전국과 부문의 서비스 관련 민간기관의 단체장 및 실무자를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2005년 8월 11~12일 ‘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위한 민간협의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은 민관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관건임을 확인하고, 향후 민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8월 23일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1차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지속된 논의 결과 조직방향과 원칙, 조직구성, 당면과제 등을 합의한 후, 지난 2006년 6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공동대표로 본인을 포함하여 부문 및 지역 인사 10명 선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국 네트워크’는 현재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8대 영역 서비스(복지, 고용, 문화, 보건, 보육, 주거안전, 교육, 생활체육)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서비스 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나 정책적 논쟁을 배제하고, 무엇보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즉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실업자,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게 복지,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학습 등의 서비스를 직간접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분과모임을 모아내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의 서비스 분과별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서비스 분과별 모임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 기업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공네트워크(정부)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미 정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대통령의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전국 시·군·구의 행정체계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체계개편에 이어, 서비스연계·조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앞의 3가지 과제(행정체계개편, 서비스 연계·조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네 번째 과제로 '민관협력'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필요한 4가지 과제 수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기관·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민과 민의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자문 및 협력을 지속해왔고, 특별히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안에 구성된 '민관협력팀'에 전문가 2명을 파견하여 이 일을 함께 추진해 가고 있다. 문제는 민간단체의 속성상 아직까지 정부의 개편속도에 맞게 각 지역에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 주도의 민관협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민과 관이 한마음으로 시·군·구 지역의 민관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에 알맞은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와 시장의 영역 외에 시민사회단

체와 민간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양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들은 한 사회를구성하는 주요한 세력의 하나로서, 이전의 지적과 비판, 그리고 위탁과 대행을 넘어 사회발전의 대안을 내오기 위한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각 부문과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보여준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지금은 현장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민서비스 현장에서 좀 더 넓은 시각과 열린 자세로 더 깊은 애정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과정'은 근본적 개혁과 진보를 통한 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단순한 체계의 변화와 쇄신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와 고령화가 가져온 구조화된 빈곤과 계층 간의 위화감 심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고조 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과 민, 민과 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속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 그리고 적극적 협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곧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희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네트워크'의 향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기본 방향이 바르게 추진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함과 아울러,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에 가장 핵심인 민관협력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는 전국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며 실제적인 전국적 네트워크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전국단위 부문과 단체 등과의 교류 및 연대·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는 시·군·구의 조직과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즉 정책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발굴을 통한 민관협력 모델제시,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공유, 필요한 연대·지원·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청취하고 모아가며 개선하고 실천할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제공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